

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
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김건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21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1. 4.

발 의 자 : 김 건 · 박충권 · 안철수
인요한 · 강선영 · 김기웅
권영세 · 김석기 · 조지연
박수영 · 유용원 · 박정훈
윤상현 · 김용태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납북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에서 북한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로 정의하고 있음.

그러나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·체포되어 형벌을 선고받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억류자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납북자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고, 최근에서야 억류자에 대해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납북자로 인정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한 바 있음.

이에 현행 납북자의 정의에 억류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억류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

록 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호).

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(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서 북한(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를”을 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”로 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(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서 북한(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사람

나. 북·중 접경지역 등 남한 외의 지역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·체포되어 형벌을 선고받고 억류된 사람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“납북자”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<u>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(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서 북한(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</u> 를 말한다.	1. ----- ----- ----- ----- <u>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u> 을----- ----- ----- -----.
<신 설>	가. <u>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(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서 북한(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사람</u>
<신 설>	나. <u>북·중 접경지역 등 남한 외의 지역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·체포되어 형벌을 선고받고 억류된 사람</u>
2. 3. (생략)	2. 3. (현행과 같음)